

第243回国會  
(定期會)

#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1月4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소위원회위원개선및소위원장선출의건
2. 2004년도예산안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審査된案件

2. 2004년도예산안 .....	1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1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1. 소위원회위원개선및소위원장선출의건 .....	23

(10시28분 개의)

○**委員長 尹榮卓**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丘冀盛**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榮卓**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열린우리당 소속의 김원기 위원과 김근태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위원님이 모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은 여야 간사 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1항은 뒤로 미루고 2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2. 2004년도예산안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10시31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교육재정 규모가 32조 7525억 원으로 사상 처음 GDP 대비 5%를 넘어섰으며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18.8%로서 정부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규모만 놓고 볼 때 정부 전체예산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교육예산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합니까? 외형적으로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산적한 교육현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교육현장에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곧잘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우리 국민들의 지나친 교육에 대한 열정 등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진 교육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은 결코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세계일류 교육선진국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들 국가의 교육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경쟁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GDP 대비 5%를 넘어선 원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복무자세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선진의식을 갖춘 교육공무원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TV에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폐교 직전의 초등학교에 한 교장선생님이 자원하여 불과 2, 3년만에 인근에서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이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넘치는 우수한 학교로 일구어낸 모범적 사례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의 교육철학과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고 혼신의 노력이 절망의 학교를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희망의 학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교훈을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금석으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尹德弘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3회 정기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공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 증가된 4조 623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 증가한 26조 3904억 원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 지원에 22조 8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127억 원, 유아교육 지원에 345억 원, 특수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에 556억 원,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3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를 위하여 증액교부금으로 834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8조 2048억 원을,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으로 4조 2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학교육 지원 분야에 1조 5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고 우수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 및 다양화·특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 특성화 지원에 600억 원,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1900억 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조성비 2300억 원,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700억 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912억 원, 국립교육기관 시설비 3398억 원, 국립교육기관 운영비 436억 원과 국립대 병원 지원비로 76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인적자원 개발 지원 분야에 1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평가와 투자실적 분석을 위하여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722억 원, 평생교육 진흥 분야에 111억 원, 재외동포 및 국제교류 분야에 5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산학연계 및 직업교육 지원 분야에 2549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산학협력 우수 거점 중심대학을 중점 지원하여 현장 적응력 있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대 특성화 지원에 1680억 원, 실업계 고교 체제개편 및 특성화·내실화 지원에 404억 원,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정보화 추진 지원에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초중등학생에게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67억 원, 대학교육 정보화에 68억 원, 도서관 정보화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은 공교육 기반구축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우리 부 소관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공공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이며 내년도 운용규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6조 801억 원, 사학진흥기금은 1880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04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내일 있을 2004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한 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총 420분간 전국 73개 고사지구 878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약 67만여 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약 2300여 명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이공계 진학 촉진책에 힘입어 자연계열 지원자는 전년 대비 약 6400여 명, 1.04% 증가했

습니다.

우리 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수능시험 당일 교통소통 원활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직후 표집채점 결과 발표를 통해서 입시학원 등의 무분별한 점수예측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3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및 실효성 있는 진학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정부예산안 규모, 2004년도 교육예산안 규모 및 특징,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정부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 대비 2.1% 증가한 117조 5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추경 대비 8.4% 감소한 67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는 2% 감소한 185조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교육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4조 6235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2527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4조 3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6조 39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 증가한 22조 393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 증가한 4조 3511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과 기능별 내용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구분해서 지방대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대 육성사업에 2200억 원, 수도권 대학에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내년 지방대학 예산 2200억 원은 순수하게 2200억 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던 예산을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성격을 분명히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시 발전을 위해서 3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교육·연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술연구 조성사업에 2300억 원, BK21사업 지원 확대에 19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의학 분야의 전문대학원 전환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5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1750억 원, 대학의 세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수 초빙 등에 37억 원,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5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서 중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8342억 원, 장애아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유아 교육비 36억 원과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 예산 28억 원이 내년에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대상을 만5세아에서 만3, 4세아까지 확대하는 예산이 320억 원, 저소득층 고교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939억 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28만 명에게 학자금 융자 지원 확대에 9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 지원입니다.

가번,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등 2개 사업에 3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번,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국 단위 교과연구회 지원,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 초중등 과학교육활동 지원,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

작 지원, 교수·학습 자료 연계개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영재교육의 강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등 8개 사업에 7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번,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과 교육대학 원어민 영어강사 초청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규택 위원 실장, 예산을 보면 증가된 것이 있고 감소된 것이 있잖아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예.

○이규택 위원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의 경우 15억 3000만 원에서 2억 7900만 원으로 확 줄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증감되면 괜찮은데 대폭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은 15억 3100만 원에서 2억 79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교사 및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국립학교 초청 15명에 2억 7900만 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은 대체로 원어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사업이 그 이상 진전되지 않고 또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업 중에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번, 교육개혁 추진 홍보 등에 교육현장수범 사례 공모 및 홍보사업, 주요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14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가번,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319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 3, 4세아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77억 4100만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폭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억 4900만 원입니다.

유아 교육자료 개발 및 자원봉사 교육에 4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부분에

장애아 교육지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63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서울맹학교 이료전공 교육관 기자재 구입비 지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제작시설 교체부분도 신규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대부분 내년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립특수교육원 지원사업에는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 구축, 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이해교육자료 개발 등 3개 사업에 8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생증식 지원에 478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학기 중의 급식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학기 밖인 방학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기로 해서 그 예산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원노사관계형성기반조성사업, 초중등교원 국외연수사업, 사도장학금 출연, 교육대학 육성사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등의 사업에 각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을 총 합친 금년도 예산은 21조 1104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6.3% 증가한 22조 44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8조 2048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봉급교부금은 5조 285억 5000만 원, 경상교부금은 12조 2599억 8800만 원, 증액교부금은 916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으로는 국제 교육세를 세원으로 하여 시·도교육청에 양여하는 예산으로 4조 238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규택 위원 잠깐, 15페이지에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교원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수업료 보조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규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그렇습니다. 교원들에게만 특별히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규택 위원 다른 국가공무원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건가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고서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간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을 다소 분류하여 성격을 명확히 해서 지방대학과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하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2200억 원이 되었고 기존의 하던 사업에 실제 증액된 분은 650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번,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6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육성에 190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분야별 지원액을 보시면 과학기술분야에 900억 원, 인문사회분야에 100억 원, 지역대학육성분야에 500억 원, 대학원전용시설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라번,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체제 정착지원을 위하여 5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번,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지원사업에 8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연구능력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230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5년까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표로 간단히 보시면 우수연구자 지원, 협동연구지원, 중점연구소지원, 우수학술단체지원, 기초학문육성지원, 보호학문분야지원, 지방대육성과제지원, 대학원 연구력강화지원, 학술대회개최지원, 국학연구지원, 상고사 및 한·중·일관계사연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 교수증원, 외국인 교수초빙 및 연구지원 등에 국립대학 교수증원 28억 8800만 원,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36억 6100만 원, 국립대학교 교원연구비 보조 300억 원, 국립대학 교원성과급 200

억 원, 산업대학 교원 산업체 연수 1억 5000만 원,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4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50주년기념사업 2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540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번, 학술연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94억 2400만 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원 110억 3700만 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 10억 4500만 원 등 3개 단체에 215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라번, 고전국역 및 한국사 연구지원에 고전국역 사업 지원, 해외소재 한국사 자료수집 이전사업, 통일대비 한국사 남북협력사업, 한국역사정보화 구축사업,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관 증축사업, 한국근현대자료 수집·편찬 사업 등 6개 사업에 137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학교육의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 700억 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보전 911억 9000만 원, 교육차관 원리금 상환 946억 2500만 원, 대학생 학·예술 활동 지원 3억 원, 사학진흥기금 지원 300억 원 등 대학교육의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국립교육기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국립교육기관 시설비 등에 3397억 7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5년까지 교육기본시설 확충 목표를 85%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학교시설 예산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국립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등에 AI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3억 100만 원,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173억 8600만 원, 교수 보직수행경비 176억 5600만 원, 서울대가 하고 있는 대학학문기반 강화 5억 원, 동북아 지역혁신센터 지원 6억 원, 베트남 국립대학 학술교류 지원 1억 원, 국립대학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 50억 원, 밀양대학 캠퍼스 이전 사업 6억 원,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에 1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립대학 병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서울대 병원 지원에 208억 4800만 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아진료부 확충 30억 원, 차관원리금 상환 61억 2800만 원, 신생아 중

환자실 및 시설·확충에 40억 원, 분당병원 운영비 63억 원, 치과병원 분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 1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번, 국립대학 병원 지원에 77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번, 국립대 병원 이전·신축사업에 167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주도병원 이전·신축 110억 원, 부산대 양산병원 건립 40억 원, 전북대병원 진료센터 신축 1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라번, 전남대 화순병원 운영비 지원으로 전남대 화순병원의 현재 건립공사 공정은 85%가 완료되어서 내년 4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 22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번, 국립대학병원 신설 지원입니다.

강원대학 의예과 신설에 따라 춘천의료원을 인수하고 병원 증·개축에 필요한 89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개발입니다.

가번, 인적자원개발종합정책 추진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6700만 원,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 연구비 2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번,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투자실적 분석에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번,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에 665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라번, 정책연구개발 지원에 12억 5000만 원, 교육통계정보 활용체제 구축 및 발간·보급 14억 4900만 원, 여성교육정책개발 4억 5100만 원,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및 발간 2억 3000만 원, 성과관리제도시행에 따른 성과지표 연구개발 5000만 원, 이 부분은 내년부터 성과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 운영에 16억 7100만 원으로 이 예산은 현재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정책개발과 토론회, 공청회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지원 1억 2800만 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운영 4억 7000만 원, 평생학습 소외계

층 지원 4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행학습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인 재취업 기회 확대 및 노인교육과정 시범운영 2억 8800만 원, 저소득자 저학력자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라번,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에 1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번, 방송고 및 방송대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에 20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방송고 사이버 교육 시스템 구축 15억 원, 방송대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 5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바번, 학력인정 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으로 중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중학교과정이 의무교육으로 확충되면서 중학교과정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원격대학 콘텐츠개발 지원에 5억 원,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에 292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외 한국학교 지원에 140억 200만 원, 재외 한국교육원 운영에 87억 6200만 원, 재외 한국학교 신축지원사업에 61억 1100만 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사업 지원에 3억 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중 APEC 사이버교육 협력사업에 4억 5000만 원, ASEM 장학사업에 6억 95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3억 2300만 원,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운영지원사업에 6억 1000만 원, 국제이해교육 진흥에 11억 9000만 원, 국제기구 인적교류사업에 7억 8700만 원, 한국어능력 검정시험 사업에 2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에 6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중 국비유학사업에 24억 6400만 원, 정부 초 장학생 교류지원사업에 27억 5900만 원, 한일 공과대학 유학생

사업에 51억 2500만 원, 한일 중고교생 교류사업에 4억 3700만 원, 재외동포 국내초청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10억 7500만 원, 그 외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사업에 70억 4800만 원 등 총 189억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산학 연계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억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중추적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에 1680억 원, 전문대학 실험실습비 지원에 70억 원, 한국재활복지대학 설립·운영에 27억 7400만 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조사업에 8억 36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 체제개편 및 특성화·내실화를 위해서 404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예산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이 지방은 교부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초중등에 있어서는 대체로 지방교부금으로 해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에 8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농특)에 24억 6400만 원,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에 2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정보화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초중등교육 정보화사업에 169억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에 21억 52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에 67억 4700만 원, 민간개발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16억 1900만 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32억 4200만 원, 교육정보화 자료 개발 및 활용능력 배양에 20억 2800만 원,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사업에 11억 7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학교육 정보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교육 정보화에 68억 6100만 원, 교육전산망 운영지원사업에 73억 8200만 원, 도서관정보화사업 등에 40억 6000만 원, 학술정보 원자료시

스텝 구축에 신규사업으로 6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원에 309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9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지원사업에 7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보고서 1페이지 하단 자금 총조달 및 운용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재원 조달규모는 6조 802억 원으로 자체세입 1조 8750억 원, 정부 내부수입 4908억 원, 여유자금 회수 3조 7143억 원 등 전년도보다 5.3%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운용계획으로 연금기금, 후생복지 등 사업비에 1조 7125억 원, 기금관리비에 565억 원, 정부 내부지출에 2189억 원, 기타 여유자금 운용에 4조 923억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기금조성계획,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조달 규모는 1800억 원으로 자체수입 1236억 원, 정부 내부수입 300억 원, 여유자금 회수 344억 원 등 전년도보다 22% 증가된 수준입니다.

운용계획은 사업비인 시설자금 용자에 1250억 원, 기금관리비에 22억 원, 정부 내부지출로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24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84억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

출계획, 기금조성계획,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忠鉉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柳忠鉉**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에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정부의 제안 설명과 같이 세입예산은 4조 6234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2527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조 3707억 71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6조 3903억 9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가 증가된 22조 39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117조 5429억 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로서 2002년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4조 3510억 8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재정 대비 지방교육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15% 대 85%로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비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부하는 증액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방교육재정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량적 집행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예산에 대한 재정적 통제 측면과 지방교육재정에 의해 육성해야 할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재정규모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도에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5%를 상회하는 5.02%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OECD 어느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또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목표치가 GDP 대비 6%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예산의 증가추세는 향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과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대학교육 지원사업, 인적자원 정책사업, 평생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그리고 국제교육협력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서 부문별로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중점 추진분야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회복과 교육복지 구현에 두고 18조 65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 지원예산은 대부분이 시·도교육청 특별회계로 교부되어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거나 국가 중요 정책사업의 투자경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각 시·도교육청 공히 자율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의 예산지원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8조 2049억 원으로서 초중등교육지원 부문 예산의 97.6%에 해당되며 16개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또는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의무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봉급과 일선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등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필요한 교육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은 전년도

결산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성과와 상호 연계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그 배분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나 일부 예산만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보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의 목적외 사용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봉급교부금 배분방식에 관한 근거조항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2005년도 이후의 비용부담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와 사전정책 조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교육지원 부문에서는 장애아 교육지원사업,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제작시설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예산안 규모는 52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열악한 특수교육지원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신규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들 사업예산 요구액의 24%만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학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2004년도 중점 추진 분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능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조 917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지원사업의 예산은 최근 5년간 교육예산 증가율이 33.7%임에 비해 대학교육예산은 18.7%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

산을 살펴보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은 우리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인력의 양성이 국가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사업은 참여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기존의 지방대학 육성 및 특성화사업 등의 예산을 통합·조정하고 추가 재정투자를 통하여 지방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200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발전 전략을 토대로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과 동시에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어 궁극적으로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이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대학 육성사업 및 특성화 사업 등과 차별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의 지방대학 관련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그 바탕 위에서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최근까지 구조조정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둘째,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집행준비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목적대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운영, 역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해서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과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나 사업성격의 명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정책사업 예산은 총 4494억 원으로 기존의 대학지원국이 추진하였던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차보전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 고전국역사업, 한국학술진흥재단 출연사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출연사업 및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사업이 인적자원 정책국 소관 업무로 조정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인적자원 정책의 평가 및 투자분석 사업과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정책사업은 2001년도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출범하고 2002년 인적자원 개발기본법이 공포되어 2003년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총괄부서로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인적자원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없이 업무조정 차원에서 기존의 대학지원국 사업의 일부를 인적자원정책국 사업으로 편성하고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만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존의 사업내용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4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3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들 두 사업은 모두 각 전략산업권별로 중점대학을 지원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일부 권역에 있어서는 두 사업을 각각 추진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인력양성과 산학협동을 동시에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의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359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 및 직업교육 지원 분야의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9%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전체 교육예산 규모는 33.7%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은 오히려 3.3%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들 사이에서 평생 및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보면 21세기를 지식사회, 평생학습의 세기로 규정하고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바 우리의 경우도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은 일반회계 731억 원과 정보화추진기금 170억 원 등을 합쳐서 총 90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의 정보화예산 규모인 1조 7412억 원의 약 5.2% 수준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조 393억 원의 0.4%에 해당하는 소규모입니다.

2004년도 교육정보화 분야의 예산편성상의 특징은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과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국사편찬위원회,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각 실·국별로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계획과 예산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총괄·조정 부서의 부재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성 미비 등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가 전체 정보화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정보화 관련 교부금의 교부기준이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과 정보화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각 시·도교육청 간의 정보화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 체제 구축사업은 2004년도에 2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하여 시범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 사업은 사업범위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사이버선생님 운영사업을 포괄하고 있어서 중복투자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사이버선생님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에 흡수하여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사용자교육 관련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는 반면 백업센터 구축이라든지 정보통신보안 관제시스템 운영, 보안취약성 분석 등 보안 관련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업의 경우 예산 세부항목 간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제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제교육협력 지원사업의 예산은 349억 원으로 재외동포교육지원 등 주요사업에 336억 원, 기본사업비인 국제교류증진에 1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국제교육협력 분야 예산안은 대부분 전년도 사업의 계속추진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지원방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점은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4조 351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원이 감액계상되었는바 이 예산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캠퍼스 토지 매각금 등 1133억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비 등 6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이전사업 등 이 특별회계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각종 지연사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2004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이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24억 64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4조 2386억 원으로서 이는 시·도 인구비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양여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2001년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용되고 있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2004년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6억 원과 자체 수입 3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89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유학사업의 경우 유학지역의 다변화 및 지역학 등 특수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등 다른 유사사업과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 초청 장학생 교류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의 우수학생 유치를 확대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나 여전히 타 부처 사업이나 외국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지원인력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전문분야별 인적 DB 구축·활용 등 적절한 사후 관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6조 801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째,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가부담 증대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4대 공적 연금기금의 하나로서 1975년도에 도입되어서 여타 연금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나 기금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과 비용부담, 급여지급 등의 구조가 같아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 202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화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 대하여 관리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과 국고학자금대여사업비 중 연금기금 사용분 및 책임준비금 적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공적 연금기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저부담·고급여 수급구조 때문에 관리공단이 자구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기금사업들을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금운용방식의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4조 92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 전체 기금운용규모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기금이 갖는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의 안정성 못지않게 수익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다 전문적인 조직개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수익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 관리공단 내외의 자금운용시스템이 최대한 이용·활용되어 동 기금사업의 기본목표인 장기적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학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1880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자세한 조달 및 운용계획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학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째, 융자금 배정비율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금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말 현재 순 조성액이 7052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이 5752억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중에서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재특예수금의 비율이 70.4%로서 기금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원 형태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융자배정비율 제고를 위한 융자사업비 증대가

가능하도록 총 기금조성액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체조성기금 비율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자체조성기금 비율 제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2002년도 말 현재 자체조성기금은 총 기금조성액의 18.4%인 1300억 원이고 총 자체조성기금 수입 중 71%인 1931억 원을 자금용자 이차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대기자금 운영수익 비율은 22.5%에 불과합니다.

이 기금의 자체 조성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금 자체를 용자하는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서 여유운용자금의 규모가 작고 기금의 안정성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기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운용의 외부전문가 확충 및 기관 자체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서 투자대상 금융상품을 다양화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처음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權哲賢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權哲賢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느라고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처음 요구한 액은 얼마입니까? 요구한 것이 얼마인데 26조가 확보되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29조를 요구했습니다.

○權哲賢 委員 29조 요구해서 26조를 확보했어 요? 그러면 확보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權哲賢 委員 틀림없습니까? 29조 요구했는데 26조 확보했다고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주요사항만 29조이고 지방재정교부금 빼고……

○權哲賢 委員 아니, 전부 얼마냐고요. 왜냐하면 특수교육지원사업 같은 것도 원래 요구액의 24%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액 총 얼마에서 26조를 확보했느냐 이거예요. 요구액을 모릅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주요사업비만 29조를 요구했고 나머지 지방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權哲賢 委員 26조 속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왜냐하면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쪽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의 혁명을 통해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신기술이 개발되는 것에 의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신제품이 생산되어야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세기를 살 수 있다 또한 문화가 이미 돈으로 이해되고 있고 문화가 바로 수입이다, 그래서 문화혁명을 통한 문화강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과학기술 강국과 문화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을 이루는 것은 창의력의 생산인데 그것은 교육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혁명을 통해 교육 강대국으로 가지 않는 한 과학기술이나 문화도 함께 발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장관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尹榮卓 위원장, 박창달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이 나라가 21세기에 살 길은 교육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혁신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 요구액이 총 얼마였는데 얼마가 반영되었는가를 보면 이 나라의 국가정책이 교육혁신을 통한 3대 강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총 요구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각 분야별 총 요구액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도 특수교육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요구액의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특수교육지원사업을 이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필요한데 24%밖에 안 주니 어떻게 특수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구액을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작년 대비해서 특수교육비가 34%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특수교육분야는 0.2%밖에 안 되는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애아교육 지원을 위해서 장애아교육지원비나 서울맹학교 이료기자재 확충, 시각장애자 점자교과서 제작시설 지원 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특수교육 수혜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대해서 장관이나 교육부 직원들이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특수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요구액 반영이 24%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대구대학에서 총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겨우 이렇게 얻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얻으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신규사업을 이 정도 얻은 것만 해도 특수교육계에서는 그나마 제법 평가해 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서울맹학교 지원, 시각장애자 점자교과서 제작시설 지원 이런 것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점자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모르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장애인의 날은 아시지요? 4월 20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고 점자의 날은 오늘입니다. 박두성 선생이 지금 서울맹학교의 전신인 학교의 교사로 있을 때 1296년 오늘 점자를 만들어 가지고 반포했기 때문에 오늘이

점자의 날입니다.

굳이 물어보는 것은 장관이나 여러 직원들이 특수교육, 장애인들에 관한 컨셉이나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역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자 점자교과서 제작시설 지원에 8억 2400만 원을 신청했는데 3억 8000만 반영되었거든요. 8억 2400만 원이 있어야 제작시설 지원이 되는데 3억 8000만 가지고 제작시설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작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바꾸겠다는 것인데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제대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놓으셨다가 꼭 요구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부 소관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학교 밖에 있는 도서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權哲賢 委員** 점자도서관도 문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내에서 점자책도 만들고 점자잡지도 만들고 외국의 많은 책들을 점자로 번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맹아학교 같은 특수학교들과 점자도서관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점자도서관 같은 것은 교육부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저는 점자도서관이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고 특히 특수학교 같은 곳은 돈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부산 저희 지역구 안에 삼락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적어서 폐교되었는데 교육감을 설득해서 그곳을 특수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체부자유아 일부 해서 140명의 학생과 40명의 교사로 구성하는데 85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하고 일부 새로 짓고 운동장 만들고 시설 갖추는 데 85억이 들어갔거든요. 장

애인지원사업이 요구액의 24%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수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요구액의 24%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하셔서 증액시킬 부분, 방금 말한 점자 제작시설 지원비라든지 몇 가지를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을 해서 국회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안에 장애인 특수학급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쪽의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는 137개가 있는데 일반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은 4102개나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학급에 있는 장애아동도 3만 1000명이나 됩니다. 전체 장애아동의 32%나 차지합니다.

일반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로 늘려야 적정하다는 전문적인 것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장관께서 이 부분의 증액을 위한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다음에 저소득층 유아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5세 아동에 대한 지원비도 제대로 다 못쓰고 있거든요. 만5세 아동 무상교육지원사업 불용액이 30% 내지 60%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런데도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매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마 아동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사이에 이중지원 같은 것이 있어서……

○權哲賢 委員 그렇지요, 이중지원체제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신경 써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거

든요.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키지 말든지, 돈도 못 쓰면서 예산은 계속 증액시킵니까?

게다가 금년에는 만 3, 4세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77억으로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은 좋습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급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만 5세지요? 만 3세, 4세는 유치원에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만 3세, 4세는 어린이집에서……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3세, 4세 유치원도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초·중등교육법에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만 5세지요.

○權哲賢 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3세, 4세가 있지요?

○教育人的資源部教育自治審議官 鄭永宣 3세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교육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3세부터 5세입니다.

○權哲賢 委員 유치원 교육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만 5세아를 받고 3세, 4세는 어린이집에서 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유치원에도 3세, 4세아 반이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앞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없어지게 되지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하고……

○權哲賢 委員 유아교육법을 만들면서 어린이집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것이 유치원은 만 5세를 하고 만 3세, 4세는 어린이집에 준다, 그러니까 너무 반발하지 마라, 싸우지 말자 이런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런데 만 3세, 4세까지 교육부에서 무상교육으로 지원해 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教育人的資源部教育自治審議官 鄭永宣** 교육자치심의관입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3세, 4세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權哲賢 委員**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 3세부터 유치원에서다 교육시키고 종일반 운영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유치원은 만 5세 아동만 하도록 해야지 만 3세, 4세까지 교육부에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면 비록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이지만 어린이집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教育自治審議官 鄭永宣** 어린이집도 저소득층의 만 3세, 4세아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權哲賢 委員** 지금 만 5세 아동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30%에서 60%인데 만 3세, 4세아는 제대로 지원이 다 될 수 있겠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教育自治審議官 鄭永宣** 예, 올해부터는 만 5세아의 경우도 별 문제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금액이 모자라 지난번 추경에서 일부 반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소득층의 만 3세, 4세아인데 어린이집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權哲賢 委員** 그러면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할 때 만 3세, 4세, 5세 전체를 유치원 교육대상으로 하고 무상교육을 점점 확대실시하게 되면 어린이집하고는 마찰이 없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니까 여성부와 교육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구획정리를 해야 됩니다.

○**權哲賢 委員** 이것은 정책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만 3세,

4세아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쪽하고의 마찰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산편성이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난번 국무회의 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만 3세, 4세아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똑같은 3세, 4세아인데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는 지원을 받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權哲賢 委員** 하여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어린이집에서 유아학교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만 3세, 4세는 어린이집으로, 만 5세는 유치원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유치원도 만 3세, 4세아까지 확대한다고 선언되는 것이어서 걱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백혈병, 소아암이나 희귀질환 등 건강장애 아이들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전무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교육부총리도 그 점에 동감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001년부터 사이버 선생님운영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이버가정교사 구축사업을 실시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무료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사이버가정교사구축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택교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왜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한 건강장애를 일으켜서 취학이 유보되고 있는 장기입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금 질병으로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들 통계



치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왜 빠졌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 프로그램도 포함시켰습니다.

○權哲賢 委員 이 프로그램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아이들 대상이 아닙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포함시켰습니다.

○權哲賢 委員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수혜 대상에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해 있는 환아들을 빼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섭섭한 것이 국감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예산편성하면서 반영해 주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국감은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지 않습니다.

○權哲賢 委員 이 부분을 꼭 포함해서 예산을 얼마 더 증액해야 이번 기회에 환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위원장대리 박창달 權哲賢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면 소위원장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찬 이후 위원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崔榮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榮熙 委員 崔榮熙 위원입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많이 강조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은 시간강사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간강사가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본 위

원은 물론 많은 위원들께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에 있어서는 교육부나 교육부총리께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정부재정이나 대학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세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전업강사 3만 5000원과 비전업강사 2만 7000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5만 2000여 명의 시간강사들이 전체 교양과목의 54.7%, 전공과목의 30.6%에 달하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당 6시간 강의를 맡는다고 해도 수입이 월 100만 원이 채 못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문 발전과 대학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막연하게 시간당 강사료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연봉 개념을 도입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崔榮熙 委員 부총리께서도 교수를 하셨는데 교육부장관이 되시고 나서 시간강사들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교육부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崔榮熙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부는 내년 부터 박사급 전업 시간강사 1만 2000여 명 중에서 우선 4000명 정도를 연구전담인력으로 선정해서 연간 2500만 원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하는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崔榮熙 委員 박사급 전업강사부터 처우를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1000억 원의 예산은 그것대

로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5만 여명 중 국·공립대학 재직자 비율은 25.8%, 약 26% 정도를 계산하면 1만 346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에게 연간 2500만 원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려면 33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이 정도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만 사립대학도 여기에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공립대학이 먼저 나가야 되겠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崔榮熙 委員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간강사료는 기본경비 항에 보수 명목으로 총 511억 736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 국·공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으로 기존에 시간강사료로 책정한 금액을 무시해 버리고 시간강사 일인당 연간 2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3365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본경비 중에서 보수 산정액 2853억 2636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학교별로 시간강사 수를 감안해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소위에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는데, 교육부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50% 이상의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에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崔榮熙 委員 앞에서 존경하는 權哲賢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예산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상세하게 언급했고 질의도 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육부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의 50%를 국고지원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기획예산처가 심의과정에서 30%로 삭감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27억 57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고지원 50%가 배정된 사업도 자세히 보면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50% 수준으로 확보되어야만 그래도 盧武鉉 대통령의 장

애인 교육을 위한 1차연도인데 면목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최소한 국가에서 50% 수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당초에 요구했던 45억 9500만 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18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權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사업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이 사업이 통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렸듯이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은 장애학생 하나만 있어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특수장애아가 자기 학급에 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장애아가 있는 학급은 25명 이내로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통합학급마다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해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 장애아 중 33%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데 35명에 선생님 한 분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4067개 일반학교의 1만 9399개 통합학급에도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전원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형태로 통합학급에 최소 1000명 정도의 보조원을 배치하는 예산으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보조원과 동일하게 국고보조 50%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아교육지원 항의 자치단체경상이전 목에 통합학급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45억 9500만 원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창달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는 학교신설, 학급 및 교실증설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7차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특히 2002년도 결산심사 때는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

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에 세운 계획을 보면 4년 동안 총 11조 25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02개의 학교를 신축하고 7848억 원을 투입해서 1만 2304개의 학급과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이었는데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금년까지 총 917개의 학교를 신축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510개의 학교만 신축해서 계획 대비 개교율이 55.6%밖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학급 및 교실증설은 금년까지 총 1만 2304개를 증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1만 1970개 학급만을 증설해서 이행률이 97%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아직도 이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학교신축과 학급 및 교실증축 조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매우 어렵습니다.

○崔榮熙 委員 지금 강남으로 모인다, 사교육비가 얼마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울 좋게 7차 교육과정만 발표해 놓고 하겠다고 예산만 반영해 놓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은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몰라서 그 당시에 이것을 실행했던 아무개 장관만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육부가 후속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전 학년이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내년에는 아까같이 교실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 학교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는 어학실습실이나 컴퓨터실 또는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의 수준별 교육을 하려면 크고 작은 교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마무리하는 2004년도에는 당초 수립한 계획 즉, 학급당 35명 이하라는 거시적인 목표가 전면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셔야 되고 이후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투자단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신설의 경우 앞으로 692개의 학교를 추가로 신설해야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 중 407개교는 공사가 추진 중이므로 추가로 285개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개 학교당 평균 130억 원의 신설비용이 소요된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산한다면 약 3조 705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학급과 교실증설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두 334개의 학급과 교실을 증설해야 되는데 1개의 교실당 평균 증설비용이 8000여만 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추산한다면 약 2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신축, 학급 및 교실 증설을 위한 2004년도 예산편성액이 2조 61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추산한 소요예산 3조 7317억 원보다 약 1조 1217억 원이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한 예산추계는 교육부에서 보다 세밀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 보아야 나오겠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분명히 1조 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과연 내년 예산 2조 6100억 원만으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학교와 학급·교실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7000억 정도 부족합니다.

○崔榮熙 委員 7000억보다 더 부족하지요.

학교신축, 학급 및 교실 증설 예산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시행 당시 수립한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잘 계산해 보시고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의견을 위원회에 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다음에 예산안심사소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오는 2008년까지 총 1260억 원의 예산으로 200개 대학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확충비 5억 원과 교구·기자재 구입비 1억 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 1차연도인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이 사업의 추진 자체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국립대에는 4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 극심한 재정난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대학에만 맡길 경우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립대학에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가 신청한 예산 중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산 30억 원과 교재·교구 개발 보급 예산 30억 원 등을 합하면 약 6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증액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음에 장애아 과학잔치 예산 확대가, 일반학생에게는 과학잔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아 과학잔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고 나머지 원격영상 교육시스템 추가구축 필요성이라든지 나라에서 이미 약속하신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예산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정몽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주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사교육비 규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10월에 교육개발원인가에서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10일쯤 나온다고 합니다.

○정몽준 위원 이달 10일에 나오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修一 이달 11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정몽준 위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정몽준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榮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택 위원 첫 질의는 예산과는 좀 먼 얘기지만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제목이 ‘교육부총리가 몇 명입니까?’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기사를 봤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를 세워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金振杓 경제부총리가 강북에 특목고를 세워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니까 교육부총리께서 강남에 중산층이 많이 사니까 좋은 학원이 많은 것이지 학원이 있다고 중산층이 강남에 이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서로 치고 받고 오락가락하고 교육부총리가 몇 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교육부총리로 승격했거든요. 부총리로 승격시킨 목적은 각 부처간, 특히 비경제 분야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과 함께 총괄하라는 뜻으로 당시에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법이 통과되고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尹德弘 부총리께서 이런 조정·통합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판교학원단지 때문에 얘기하면서 그 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는지, 그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이 정부의 한계인지……

엄연히 교육부가 있고 교육부총리가 있는데 왜 자꾸 서울시가 얘기하고, 또 서울시에서 얘기하니까 서울시교육감이 반대하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니까 교육부총리가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총리가 할 일을 다른 부처에서 할 경우에는 규제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막을 방법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런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문에 제 목소리를 자꾸 내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늘 정부 내부에서 조율하고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결부되어서 여러 부처의 여러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 이상 놔두면 곤란하다 싶을 때는 언론에 얘기를 하고 제 목소리를 높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제 얘기를 신는 것보다는 정부 내부에서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부총리한테도 그렇고 관계부처에도 교육에 관한 한 교육부와 협의하고 교육부가 일관되게 발표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전달했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몇 가지가 신문에 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가 끝나고 나면 내부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교육부총리로서의 조정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또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교육비 급증과 학력 하향 평준화의 주범이 고교 평준화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지방부터라도 중·고교 입시를 부활시키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보고 학부모들이 손해를 봐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많은 문의가 옵니다. 아주 안타까울 정도예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 안 되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달라든지 법적으로 규제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택 위원** 다음은 대학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을 보니까 참여정부 최고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22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역 균형발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해 놓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

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을 고루고루 평준화시키자는 얘기입니까?

제 기본입장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할 것 없이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향상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동안 지방대학이 발전을 못 했으니까 더 지원해 주고 더 차별화해 주고 더 특성화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전부터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뜻에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수도권은 완전히 중단시키다시피 해 놓고 지방 쪽으로 가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식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에서는 지식의 창출,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외국기업 최고경영자 16명을 청와대에 불러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동북아의 허브 얘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 동북아 허브다…… 동북아 허브라고 하면 바로 수도권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지식산업, IT 산업이 제일 발전한 곳이 수도권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국경제성장의 엔진을 동북아 허브에서 찾겠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부총리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평준화 쪽으로, 오히려 하향 평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우리 한국 성장엔진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허브를 주장하는 盧武鉉 대통령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따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숫자는 전 대학의 85%이고 학생 수는 78%에 달하는데 국고 지원은 사립대학 운영수입의 4.6%밖에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의 국고지원 비율이 4.6%인데 비해 영국은 35%, 미국은 19%, 일본은 13%이고 심지어 일본은 경상비의 50%까지 보조해 주는데 특히 지방대학에 보조를 더 많이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처럼 기부금입학제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당시 부총리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IT 분야에서 최강국은 아니지만 강대국 중 하나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상으로는 대학교육정책상으로는 모든 경제정책이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백날 평준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른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기업도 평준화하고 이번에 지역균형발전대학이라는 것도 해서 이것도 평준화시키고 전부다 평준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하향 평준화로 가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나머지 저소득층 문제, 실업계고교 문제, NEIS 보완 문제, EBS 국고지원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은 초중고는 거의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보편교육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대학만은 철저하게 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우수한 대학은 키우고 도저히 불가능한 대학은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북아 허브도 우리나라 대학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맞고 그 중에서도 특히 최첨단으로 나가는 대학은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 대학을 최첨단화된 대학과 지역의 거점대학과 지방 공단과 결합되어 있는 대학으로 구분하고, 그것도 탑 다운 방식으로 키우는 방법과 바텀 업 방식으로 키우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규택 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예산배정이 얼마 안 되어 일단 말이에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는 신산학협력체제라는 지 수도권특성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규택 위원 지방에는 2200억이고 수도권에는 6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코끼리 비스킷이라는 말이에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택 위원 이럴 때는 차라리 기여입학제나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에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래서 지방대학육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어서 2200억을 확보해 두었고 나머지 BK21 같은 것은 수도권 지원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아마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가 기여입학제가 받아들여질 만큼 기여문화가 성숙되었을 때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일 지금 기여입학제를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몇몇 사립대학만 혜택을 받고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기여금입학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택 위원 부총리, 조금 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교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을 만났는데 지방에도 된답입니다. 다만 산골짜기 이런 데서 안 될지는 몰라도 지방대학에도 기여입학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수도권 수도권 그러는데 만약 수도권 대학에서 기여입학제를 해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을 지방에 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묶어 놓으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들면…… 동북아 허브 쪽으로 간다, 세계경쟁력을 어떻게 한다,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R&D를 한다는 등 하는데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과감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지요.

다른 분이 도입하면 오해가 있습니다마는尹德弘 부총리 같은 분이 도입하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동의해 주고 합의해 주고 공감을 할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말로만 검토하시면 곤란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대학총장님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연세대학 총장님은 박수로 환영하고 다른 대학 총장님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金敬天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위원개선및소위원장선출의건**

(15시09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위원개선및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일부 소위원들을 개선하고 공식 중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金敬天 위원, 崔榮熙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薛勳 위원을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김근태 위원을 각각 보임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에 金敬天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에 황우여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金敬天 위원이 양해해 주셔서 李在五 위원께서 1분만 서면질의하고 가신답니다.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차피 미발추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하기로 했었는데 거의 마비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李在五 委員 예산에 반영해서 넘겨야지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金敬天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와 계시는 국립대학병원 원장님들께서도 가시도록 하시면 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지방에서 와 계시는 국립대학병원 원장님들은 오전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물어 보았더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먼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金敬天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택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노벨평화상에 대한 문제를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평화상을 폄하하고 노벨평화상에 대한 근거 없는 지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발언을 하셨는지 나중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노벨평화상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노벨상 중에서도 노벨평화상은 노벨상의 꽃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의 꽃을 받으신 존경하는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것을 간혹 심심하면 한번씩 폄하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尹榮卓 위원장, 박창달 간사와 사회교대)

민주당의 金敬天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핵심국책사업으로 예산규모가 2200억 원에 이르고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대학 지원사업 중 공·사립대 특성화사업, 국립대학 발전계획사업,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 전체 예산의 70%인 1550억 원이 기존

사업예산인데 부총리께서는 사업방식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지지부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지난 번까지는 적은 돈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한 데 합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敬天 委員 어쨌든 간에 이것은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결산 질의 때 지방대학육성사업 500억 원 100%가 경상보조로 편성되었다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예산의 91%가 자본보조로 바뀐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90% 정도가 경상보조사업인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2002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에는 한 50% 정도가 지원되었고 내년부터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보수·수리 정도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金敬天 委員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800억 원을 증액시켜서 기존의 지지부진한 사업을 잘 일구어서 타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학 시간강사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동부는 그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인데 정작 시간강사 문제의 담당 부인 교육부는 사업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시간강사 문제는 고급인력 실업문제이기도 하고 청년실업 문제이기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했는데 결국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100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액의 증액이 어렵다면 박사급 전업 시간강사 4000명에 대해 연구전담, 강의전담, 산

학전담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 예산만이라도 내년 에 꼭 반영해서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을 막고 시간강사 처우를 비관해서 학문을 포기하는 고급인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동포교육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외동포교육사업 예산을 보면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파견교사 또는 교원의 인건비가 각각 52%과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현지 채용교사와 교원의 여덟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와 교원의 인건비가 높아서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선 물가가 한국보다 높고 주택임차금, 해외파견수당 같은 것을 감안하면……

○金敬天 委員 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있는 교사보다 여덟 배가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무래도 현지 교원은 주택임차도 필요 없을 테고 해외근무수당도 없을 테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나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통일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국제봉사단을 세계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교육진흥원을 실무기관으로 해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병역면제 혜택을 통한 자원봉사 교사나 교원을 선발해서 해외동포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무래도 정규 교육기관이니까 단순한 자원봉사자 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고 엄격한 자격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敬天 委員 물론 엄격한 자격심사를 해서 병역면제의 혜택을 준다면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덟 배에 달하는 돈을 주지 않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일단 국방부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金敬天 委員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통부와도 협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65명에 대한 파견교원 교체경비가 4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파견교사 및 교원 106명의 61%에 해당해서 지나치게 낮은 교체로 인해 예산낭비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체하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3년에 2년 정도 더 근무를 하니깐 평균 4년에 한 번 정도 교체가 됩니다.

○金敬天 委員 4년에 한 번 정도라면 22% 정도 되어야 되는데 61%가 교체되거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통계수치로 나온 것은 61%가 교체되었습니다.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局長 李文熙 국제교육정보화국장입니다.

예산서의 65명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갈 때 29명, 올 때 29명입니다. 그래서 65명입니다. 그러면 약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년 30%씩 교체가 됩니다. 65명이라는 것은 가는 분 32명, 오는 분 32명 이렇습니다.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중복 계산이 되었습니다.

○金敬天 委員 중복 계산이 되어서 그렇다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200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5개 한국학교의 신규 시설사업 중 연세한국학교는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학교로서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체 건물을 소유할 수 없는 형편인데 임대한 교사 철거로 인하여 학교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형편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최근 한국 기업의 대거 중국 진출

출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 내 학교의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연세한국학교 이전 신축사업 예산 12여 억 원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희들도 2년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이 점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부 사업 중 여성평생교육활성화사업이 예산심의 중 교육부 사업을 이유로 2004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여성부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이 깎였으나 정작 교육부 예산 어디에도 여성평생교육활성화사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사업은 고작 4억 5000억에 불과한데 여성교육정책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기를 여성 전체에 대한 권익 향상에 관해서는 우리 부에서 예산을 짤 수 없고 우리 부는 여성교육 프로그램, 고급인력 사회진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비로 지금 5억을 할당받았습니다.

○金敬天 委員 제가 여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또 교육위원이기도 한데 여성문제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치고 저기에서 이쪽으로 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하는 의식에서 깨어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사실은 저희들이 27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金敬天 委員 어쨌든 이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대생진로개발취업지도촉진사업은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유아교육비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인데 저소득 도시 가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원비 외에 필요한 준비물 등 추가비용으로 인해

서, 또 한편 농촌의 경우에는 원거리 유치원생에 대한 순환버스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유치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와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차별 지원 또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것은 시·도교육청에 순환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리고 유치원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치원 교육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유아 미술학원이나 종교시설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 문제는 제가 장관으로 온 그날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아무튼 공교육이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지원하기 힘들다라는 유아학원이나 미술학원이 공교육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유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敬天 委員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를 당하는 유아들이 있다면 결국 교육의 첫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교육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통일교육 예산의 중요성은 지난 결산심의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또 지난 달 22일 통일교육과정을 학교의 정식 교육과정으로 두도록 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리 부에서 통일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과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金敬天 委員 통일부에서 답변은 없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우리 부 관련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金敬天 委員 통일부에 제안을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아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리 부가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金敬天 委員 통일을 지향하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늘 관심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통일교육 관련 사업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 전부로 예산은 2억 원 미만에 불과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부총리께서는 통일교육지원법이 언제쯤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마 2004년 상반기가 되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金敬天 委員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또 예산을 포함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원어민보조교사가 계약 당사자로 180명의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법률상 계약 위반의 책임이 없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법률상 책임은 없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나 법적 책임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도덕적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도 이것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敬天 委員 교육부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신인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4년 8월 31일까지 필요한 예산은 14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180명의 영어보조교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구촌학교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부 국감 때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습권 보호를 촉구한 바 있지요? 그때 지적받으셨지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國際教育振興院長 吳聖三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지난 7월 여러 유력 일간지와 모 방송사를 통해서 저소득 외국인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인 지구촌학교 개교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작성된 지구촌학교설치계획안이 10월에 일요지구촌학교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國際教育振興院長 吳聖三 이번에 지구촌학교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수요자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총 실시하게 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1년간 시범실시를 확실히 하고 수정·보완한 다음에 그 1년을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서 추후에 이런……

○金敬天 委員 제가 알기로는 당초 6억 원을 요청했으나 1억 만 반영되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했다고……

○國際教育振興院長 吳聖三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가 신청한 것은 1억 원이었고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지구촌학교는 거의 매일 학습을 하는데, 일요지구촌학교는 일요일 몇 시간만 하는 것이지요?

○國際教育振興院長 吳聖三 예,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갈 것이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인데 그들의 교육 문제를 이렇게, 고소득자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마는 특히 저소득자들의 자녀교육이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10월에 사업을 변경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변경을 보면서 국제교육진흥원이 교육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전준비 없이 계획을 추진하면 결국 용두사미 격이 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일요지구촌학교는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학생과 일반학생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시범학교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앞으로 진정한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각종 자료와 정책개발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國際教育振興院長 吳聖三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원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國際教育振興院長 吳聖三 알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됐습니다.

전국 단위 교과연구회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와 유학생 유치사업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예산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달 金敬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한나라당의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재정규모의 비율을 보면 2000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에 처음으로 5%를 상회하는 5.02%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 교육재정목표율 6%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5%를 넘어선 것과 전체 국가예산이 긴축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예산 총증액 2조 4000억 원 가운데 교육부 예산이 1조 5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盧武鉉 정부는 최대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를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도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관련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해서 2005년도 교육부 예산은 GDP 대비 6%까지 확보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의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번에 지방대학육성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GDP 6%까지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중앙교육재정 대비 지방교육재정의 구성비율을 볼 것 같으면 15.0% 대 85.0%로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교육재정비율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는 증액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 중 지방교육재정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본부의 제량적 집행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0년에 5800억 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의 합리적 통제 측면과 지방교육재정의 뒷받침으로 육성해야 할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규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존경하는 金敬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도 살리고 지역도 발전시키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다가 돈을 조금 더, 금년은 한 650억 원을 추가하고 내년부터는 한 3000억 원씩 매년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또 신당인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굉장히 홍보하고 정부의 장·차관 중에도 그 당에 가서 보고도 하고 그 당의 의원총회에 가서 홍보도 하는데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너무 짧아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넣어 놓고 구체적인 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이 센터가 된다고 해 놓고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와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단을 결정하고

평가하고 돈도 다 내려 보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자금 나누어 먹기, 내년 총선용입니다. 지역에 돈 갈라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이것을 정 하고 싶으면 1년 더 꼼꼼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내후년부터 하세요.

위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대학도 살리고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발전도 가져오고,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보입니다. 너무 급하게 졸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새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의 지방대학육성사업 예산, 대학 다양화·특성화사업 또 국립대발전계획사업 예산 이런 것들을 묶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650억 원을 더 해 가지고 금년에 22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주체가 바뀌어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단에 대한 평가도 하고 돈도 나누어 주고 다 하는 모양이에요.

하도 놀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BK21사업도 사실은 실패입니다.

지금 할 수 없이 1조 4000억 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金大中 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학에 뭔가 선심을 쓰고 대학의 연구원이랄지 교수들이랄지 대학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려고 시작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들어서는 정부마다 1건씩 대학에 던져주는데, 이것 잘하면 팬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1년만 연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가만히 보니까 시작할 때 우리 국회에 와서는 이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신당에 쫓아가서 설명하고 그 당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는 주체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잘 만들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대학·산업체·지방자치단체 협력체 형식을 갖추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BK21사업의 지역대학육성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또 인력양성 위주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방대학육성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기존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정부가 지방대학을 위해서 뭔가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소란스럽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존 사업과 새로 하려는 이 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곧바로 사업효과를 아주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또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우니까 부총리, 이따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과거 정부들이 대학 구조조정한다고 돈을 몇 년 동안 많이 썼습니다. 7000억 원 가까이 썼어요.

구조조정은 하나도 안 되고 돈만 날려 버리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참여조건으로 제도개선항목을 두어 가지고 대학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방대학 구조조정방안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아까 본 위원이 했습니다. 2003년 6월에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이 없어요. 내년 가까이 가서야 확정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지원 방식이랄지 사업단 유형, 평가기준 등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도 3개월 전부터 시작했고 아까부터 보팀 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자세히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부 예산 가지고 파일럿(pilot) 방식으로 집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후에 일어날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유사정책의 통합·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대생 진로개발·취업지도 추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여교수 채용목표제도와 연계해서 하

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연계하는 것이 좀 우습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늘릴 것입니다. 3억이 됩니까?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늘릴 테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정도 늘려서 10억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정책을 개발하자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여자들만 특별히 대접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대학을 나와도 남자들 위주로 뽑지 여대생은 뽑아주는 데도 없고 여자 박사는 남자 박사의 10분의 1밖에 취직이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인력을 이렇게 사장시킬 것인가, 여성인력도 써야 됩니다.

여성인력 개발할 때 남자보다 돈이 더 들어요. 화장품비도 더 들고 옷값도 더 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써요. 이렇게 고급인력을 개발해 놓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차별되면서 취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성인력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시는데 여성교육정책 개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 또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돈을 많이 써도 모자랍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 해 주면 어디에서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을 뜨셔서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사업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예요. 국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골고루 잘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평생학습도시 예산을 깎아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반영시켜 주시라는 취지의 질의를 서면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실업계고교에 대해서도 예산을 깎지 마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하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업계고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원에 대한 교육예산 그리고 고교생 창업스쿨, 중소기업청 같은 데는 고교생 창업을 위해서 1년에 몇십억 원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업고교가 잘 안 된다고 걱정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창업스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지방대학육성사업할 때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것도 그 사업하고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통합·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EBS나 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기관과 협력·운영해 달라는 질의와 예산을 늘려달라는 질의입니다.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질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薛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 委員 아까 이규택 위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근 정부부처의 장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발언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교육부장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나서서 교육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혼돈에 빠져 있고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말씀하셨고 재경부장관·한국은행 총재·서울대총장, 서울대총장은 교육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부부처의 장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볼 때 참으로 불필요한 일까지 하고 있다, 그 부처의 장으로서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언론들이 대충 짜깁기해 가지고 대서특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만 또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혼란스러워하고 도대체 교육부장관이 누구지, 교육부장관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교육전문가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리 교육에 일가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교육전문가처럼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안타깝다 못해서 무엇인가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시장께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에다가 특목고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목고가 다 강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남에는 하나 있습니다. 다 강북에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것을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강북에다 특목고를 지으면 강남·북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경부장관도 주택문제를 잡는 데는 교육문제가 걸려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투기가 있는 것을 교육문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투기꾼들이 설치서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투기꾼들을 잡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을 교육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교육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장이 그러면 서울시장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찾아가고 언론에 대 놓고 서울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장하고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총리께서 학자시기 때문에 갈등을 안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참고 계시면서 속으로 소화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찾아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재경부장관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혼란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한마디 하면 국민들은 교육정책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이 이야기하면 교육정책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문제의 주무부처인 것을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평준화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서울대총장께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평준화 폐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수한 5%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평준화 폐지가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30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까지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평준화가 만일 안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사교육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평준화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주장들은 아무리 보아도 성급한 판단이고 평준화를 폐지하면 결국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겠다는 것인데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면 중학생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중학생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고3이 받는 고통이 중학생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를 줄이자고요?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평준화 폐지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는 지방대학에 획기적인 육성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방대학육성발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000년 12월에 지방대학육성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지방대학의 활로모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고 올 7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를 해서 지방대학 육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가, 특히 교육부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치적 시각으로 본다면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서 총선에서 특정 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아무 일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학지원사업이 국책사업마다 지원분야를 달리해서 역량결집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관련 사업을 통합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 지방대학지원사업 중에서 공·사립대학 특성화에 550억, 국립대학발전계획에 400억, 지방대학 육성에 600억 이것을 통합해서 220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650억만 증액된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 많은 지방대학을 육성·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 예정된 대로 투자를 해야 지방대학 육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씩 쪼개서 나눠주는 식으로 될 터인데 결국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당초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안대로 최소한 3000억 원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지방대학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재정투자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약속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원래 안대로 최소한 3000억을 확보해서 지방대학에 투자해야지 2200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하고 싸워서라도 3000억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2200억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열의가 적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까 김정숙 위원하고는 전혀 달리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증액해서 당초 안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

단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崔榮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시간강사 한 분이 자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업이 안 되니까 하다하다 못해서 자살로 상황을 마감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 예산담당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지만 최소한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만큼은 확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강사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을 다 알면서 이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이것도 원래 안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육 자체가 부실해진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없습니다. 모든 당에서 다 일치하고 있는 의견이고 심지어 盧武鉉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런 공약은 지킬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제하 단체·인물연구 예산도 국편에서…… 국편에서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정치적 요인인지 아니면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인지 또는 근대정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하 단체와 인물연구사업을 국편이 나서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2001년, 2002년에 각각 2억 이상의 예산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예산책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盧武鉉 정부 들어서 국편에서 2001년, 2002년에 했던 사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밭대학의 산학협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증액해서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을 위한 내부시설예산

이 삭감되었다는데 경기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내부설비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의 특수생명자원연구동 예산, 강릉대학 토지매입예산 등등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달 薛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우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위원 기획예산처와 조정하면서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짜놓고 보면 역시 불만이 많은 법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2004년도의 교육정책을 숫자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상임위나 국감을 통해서 각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또 감사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검토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이 예산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균형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아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이 예년의 예산편성 비율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도 0.1% 정도의 구성비, 대학도 11% 정도의 구성비, 대학의 예산배정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화하고 영역이 넓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느는 것도 미미하고 학교교육 예산부문에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본예산에 부총리께서 그동안 피력해 오신 유아교육과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의지가 과연 반영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황우여 위원 그런데 유아교육과 고등교육부문이 반영이 안 되었구만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황우여 위원 나중에 교섭한 자료를 내주시면



예결위 본회의 때 강조를 하면서 국정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황우여 위원 단편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외국교과서 문제인데 일본교과서 문제는 나름대로 항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중국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시민단체나 또는 학계에서는 세미나도 하고 이 점에 대한 관심과 국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반영했는지, 상고사 부분에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경비하고……

○황우여 위원 중국부분이나 그밖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연구비는 학술진흥재단……

○황우여 위원 학술진흥재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신문화연구원이 아니고요?

○教育人的資源部次官 徐凡錫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9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과는 별도로 지난번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할 때 학술연구사업에서 상고사 및 한일, 한·중·일 관계 연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체계적으로 우리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 논의를 했습니다.

○황우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일본역사교과서는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중국부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학계와 접촉하면서 느낀 것이 중국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정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주도해 온 여러 가지 정조가 나타나고 있고 논문이나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 커지기 전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만은 작아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문제도 그렇고 역사문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부분 중에 중국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꼬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는 유학생 유치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탓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탓인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이 나와 있습니까라는 예산이 극히 미미한데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몇 억인가요?

38억을 요청했는데 30억이 깎여서 8억으로 되었는데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정부의 유학생유치사업 현황이 2002년도 기준으로 5871억입니다. 그리고 국비유학생지원 5000여명에 235억 엔이에요. 그리고 사비유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100억 엔이에요. 또 유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숙사, 우리는 삭감된 부분인데 기숙사건설 장려금, 기타 73억 엔이에요. 유학생 상호교류비용이 27억 엔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을 보내 줌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부총리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다른 부처에 간곡히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원, 서포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3세계나 동북아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수천 명 단위로 데려다가 키워야 됩니다.

그 비용은 결국 지방대학 육성자금으로 쓰고 대학은 현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학금을 통해서 외국 학생들을 키움으로써 우리나라의 먼 훗날을 봤을 때 교육수지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강하게 호소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좀더……

그리고 이것은 38억 원 정도로는 안 됩니다. 100억 원 단위 이상으로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일본이 5800억 원 수준이니까 국력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도 1000억 원 단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독일이 국민소득 1만 불일 때 프랑스와 경쟁하면서 전 세계의 장학생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불어권에서 더 많이 데려오느냐 독어권에서 더 많이 데려오느냐 하는 경쟁을 70년대 국민소득 1만 불 할 때 독일과 프랑스가 했습니다. 지금 독일이 세계 최대 수출국을 유지하는 것 뒤에는 그러한 교육의 뒷받침과 국제적인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아마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늘 외치고 한 것이 국회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다 강조해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 수가 공식적으로 200만 명이니까 인구의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중 20분의 1 정도는 특수교육에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지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이 점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좀더 강하게 펼쳐 나가세요. 신문에 대고도 한 말씀하세요. 서울시장도 야단하는 판에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강하게 인터뷰도 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교육부총리의 전면 인터뷰가 나가야 됩니다. 주말에 기사 없어서 야단일 때 기자들 불러다가 테마를 잡으셔서 큰 것 하나씩 터뜨리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달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사소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도서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지역의 교육현장에 가 보면 사서도 사서지만 책이 없대요. 그래서 책을 사 주어야 되는데 국가예산으로는 한이 없습니다.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학교에 공급하는 도서를 반액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일반 도서관에 납품할 때는 출판사들이 반액에 납품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학습용 도서로 납품할 때는 출판사가 반액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갖추면 사실 출판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학교현장에서는 반액에 2배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교육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육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국회에 말씀하시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해요.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출판업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金敬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국에 방문해 보니까 중국 현지의 외국인학교 문제가 절실해요. 지금 중국에 엄청난 인

원이 갑니다. 엄청난 상사원들과 엄청난 교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중국과의 무역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애들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시급한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밤잠을 안 자고라도 해결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경제부처가 앞장서야 됩니다. 상공회의소나 KOTRA에서 기획예산처를 압박해서라도 이것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학생이 30명만 있어도 학교를 지어 주었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명이 아니라 지금 600명 이상 됩니다. 심양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첩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지방분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여성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정협의하면서 행자부장관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보육은 교육부가 맡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이것을 여성부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는 몰라도 교육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국무회의에서는 일단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교육부가 3세아부터 교육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누차 얘기하고 우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령에 의해서 분리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제도화하자, 연령을 가지고 분리하는 방안은 추후 강구해 보자 이 정도 수준에서 봉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아 공교육의 문제도 걸리고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사실 역차별입니다. 지금 보육 책임은 양 부모가 다 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적인 면에서, 이것을 한번 여성부로 가지고 가면 5년에서 10년은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장관께서 부드럽게 나가지 마시고 한바탕 불으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여성부가 말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도 있는데 왜 여성부가 말씀입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습니까? 부권의 문제도 있고 남자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여성부가 말을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부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가지고 가겠다,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요. 목소리를 내셔야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보육개념과 교육개념의 혼재,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봉합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盧武鉉 정부의 아주 확고한 입장인데 여기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특히 여성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이 뿔뿔 뭉쳐서 반대예요. 보건복지부에 남거나 아니면 교육부로 오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산배정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큰 예산의 움직임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지방교육청으로 넘겨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회공론화하세요. 지금 쉬쉬 해서 범안을 넘겨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국가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여성에 대해서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위원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의 윤경식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방대학인 충북대학교와 충북대학교병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시설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획예산처 조정 기준으로 3개연도 상위 10개 대학에 대한 시설예산 지원금액을 보니까 충북대가 257억 원, 경상대가 256억 원으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조정된 2004년도 시설예산 지원금액도 충북대학교는 74억 원으로 상위 10개 대학 중 10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수치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식 위원 예산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감안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충북대학교가 신청한 예산 중 인문사회 계열 다목적 강의동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금액이 설계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립비 예산 요구액은 역시 설계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2건은 요구금액이 불과 3억 원밖에 불과한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인문사회 계열 다목적 강의동 예산 신청은 기존 건물이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의동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처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교육기본시설을 갖추려면 다목적 강의동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억 8000만 원의 설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탓만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서 기존 건물이 허물어지고 있고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는 지방대학 측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설득력이 없습니다.

○윤경식 위원 충북대학교가 다른 지방대학보다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원금액의 순위도 꼴찌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숙사 건립 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국립대학 기숙사 보유율 평균치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건축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13%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 충북대학교는 기숙사 보유율이 7.9%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목적 강의동 건립을 위한 설계비만이라도 2004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존경하는 윤경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저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식 위원 내일 교육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대학별 예산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과 균형예산 수립을 위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사육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사육센터는 현재 건립되었는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97년 11월 보건의료생명과학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99년도에 교육부는 충북대학교에 실험동물사육센터 설립을 인가해서 현재 센터 건물은 거의 다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특수시설과 내부장비 즉, 멸균기 소독기 사육장치 등이 있어야만이 이 센터가 가동될 텐데 정부에서 설비구입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98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에 32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센터건립 예산은 지원하고 내부장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물론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반영할 생각입니다.

○윤경식 위원 이 부분도 교육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반영시키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에서 기획예산처에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부 기자재가 구비되지 않아서 하드웨어인 센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지원한 건축지원 예산이 56억 원인데 이것의 효율성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실험동물사육시설은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로 126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은 OECD의 국제 GLP 규격에 적합한 유일한 대학시설인 만큼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적 차원에서 예산의 특별 지원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정상 가동을 위한 교육부의 대책과 예산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역시 서면으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충북대학교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91년도 250병상으로 개원해서 1일 평균 외래환자 1500여 명과 입원환자 400여 명의 진료를 담당하는 충북 도내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 병원들의 고가 의료장비 도입으로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초음파 진단기, 일반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기, 골밀도 측정기, 수술용 현미경, 수술대, 마취기 등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1991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인 5년을 2배 이상씩이나 초과한 채 무려 1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의료기자재 확충 및 노후병동 개·보수와 관련된 국립대학교 병원의 연도별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전체 국립대학교병원이 98년도 이후 한 차례 이상 노후시설·노후의료장비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북대학교병원만이 한 차례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번에 노후병동 개·보수와 의료기자재 확충은 신설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대학병원도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식 위원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윤경식 위원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그 전에라도 된 적이 있는데 충북대학교병원은 올해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고, 부총리께서는 전국의 대학병원 중 충북대학교병원만이 의료기자재 확충 및 노후병동 개·보수 관련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 사유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북대학교병원은 2000년 이후 2년간 심한 노사분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2년간은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무과업을 달성하는 등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노사 모두가 협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외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까 金承澤 병원장께서도 장시간 대기하시다가 가신 것 같은데 金承澤 병원장이 취임한 후로 더더욱 충북대학교병원이 노사화합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아주 성실하게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마가편이라고 잘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어야 더욱 더 신바람이 나서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병원도 점차 수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예산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의료장비를 교체해야 될 금액은, 현황이 모두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92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91년도 92년도 구입분 총액이 80억 4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 관련 예산 문제 그리고 충북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예산 문제 그리고 학술진흥재단의 학술회관 건립, 여기 朱子文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96년도부터 교육부장관이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교육부에서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밭대학교 산학협동관 건립지원 예산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하고 강릉대학교 토지매입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 운영비 지원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몽땅그리고 결국 새로 반영해서 늘리는 예산은 불과 650여 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집행할 것인가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들은 미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문제에 대해서 2001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섭하면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학재학자녀 학비지원에 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教員政策審議官 李英萬 예, 있습니다.

○윤경식 위원 그러면 내용은 다 아실 텐데요,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면 교육부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요.

○윤경식 위원 합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창달 위원** 박창달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교육부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신 尹德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몇 분의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부처에서 산발적인 경쟁 비슷한 교육정책의 발표,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모든 분들이 너무 집중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즉,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맞고도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몇 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학교정책에 대해 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다보니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좀더 악착스러운 면모를 보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성위원회에 잠깐 참여를 했는데 도저히 본 위원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여성위원회를 탈퇴하고 나왔지만 교육부총리께서는 좀더 업무에 욕심을 가지시고 악착스럽게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보면 교육혁신위원회 운영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은 16억7100만 원입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운영비로 편성된 2003년도 예산은 7억4000만 원입니다.

대통령자문기구에 불과한 교육혁신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운영비 예산에 비하여 137.4%가 증액된 것 같은데 대통령자문기구에 불과한 교육혁신위원회 운영비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운영비 보다 137.4%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번에 구성된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번에 했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는 달리 정책을 새로 개발하고 공청회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는, 아무튼 단순한 자료수집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을 개발해서 만드

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로 경비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박창달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23명입니다.

○**박창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성과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십여 차례 계속 워크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창달 위원** 워크숍만 해 가지고 큰 성과가 나겠습니까?

자문기구의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또 이 자문기구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성격이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만큼 독립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보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개발물을 통합·조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교육혁신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처럼 연구개발물을 통합·조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독자적인 연구, 정책개발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달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부 공무원들은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안 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물론 하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주 관심사라면 교육부는 일상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주로 단기적인 전망이 주가 될 것 같고, 혁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망을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달 위원** 항상 '혁신' 좋아하다가 망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괜히 그런 것들을 마구 만들어서 엉뚱한 것을 내서 교육에 혼선만 가져

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성이 있어야만 어떤 시기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은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지 중간에 와서는 옳은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총리께서 한번 더 재고해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어서 오히려 정책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 아마 더 나올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무튼 혁신위원회와는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박창달 위원 잘 활용하십시오.

군공항 주변 학교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부총리께 군공항 주변 학교의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박창달 위원 또한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당한 요구를 부처이기주의와 칸막이식 행정으로 번번이 묵살하는 관련부처의 업무 비협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항공기소음피해대책기획단’ 설치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과 관련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감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11월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2004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실태조사에 한 3억~5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달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규택 위원님과 윤경식 위원

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중등교원 자녀학비 지원문제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다른 일반공무원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들이 본인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마음 아픈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박창달 위원 그리고 지방의 교육공무원 자녀들을 서울로 대학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부총리께서는 자꾸 다른 일반공무원과 비교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관철되어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양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얼마쯤 들 것 인지를 계산해 보았는데 한 1275억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박창달 위원 일단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이후부터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에 따라 대학에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2003년 3월에 장애인시설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특별전형에 의한 장애학생 재학생 수를 보면 2002년 12월 말 기준 총 1167명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는 힘든 사람을 우선해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서럽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배정에…… 과거 부총리께서 총장으로 있었던 대구대학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박창달 위원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

면 각오를 하셨는지 들려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대구대학교 총장 시절에 전국 장애대학생의 30%가 대구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자원봉사자까지 붙여 주었습니다마는 서울에 와 보니까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별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해 엄청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생까지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달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 내 왕따와 폭력문제를 예방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성 및 생활기술 함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시작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갖는 상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2004년도 예산안 사정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단체가 상당수 있는바 여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연계활용이 가능함을 들어 이 사업예산을 축소조정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사업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재원 확보가 어렵고 또 예산당국을 설득하는데도 힘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동 사업 첫째인 2003년도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상에는 초등학교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면 임의적으로 사업내용을 바꿔 중학생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히 초등학교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한다고 하였다가 정작 사업 추진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고 중학생용으로 변경한 이유

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국회에서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중학생용으로 바꾼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자살이나 흡연 같은 것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생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신문지상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학생부터 한번 해 보자고 부내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승인받은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부득이 당시 여건이 중학생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생으로 했던 것입니다.

○박창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관련예산과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 교육연구기관 연계운영 및 학습자료 연계개발사업 또 전국단위 교과연구지원 사업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委員長 尹榮卓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셨고 또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김정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재량적 집행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경상교부금의 10분의 1로 되어 있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장려사업이나 재해대책사업과 같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재정세계개혁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의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뿐만 아니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부와 이 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우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업체-상공회의소 같은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과 NGO 같은 민간단체 등이 모여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혁신 네트워크는 그 지역에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기업,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과 거기에 충원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연구해서 사업을 확정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봐서는 커리큘럼 개발 및 지역의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것이 되고 기업으로 봐서는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를 받아들여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으로서 양성에서부터 고용에 이르는 일관된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프로젝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사해서 중앙정부로 보내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심사해서 적합한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본 일이 없는 독특한 제도이고 이 제도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역에 있는 교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없는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쳤고 교육부도 각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 조직과 추진방법 같은 것들을 거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는 추진계획이 완전하게 다 드러납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서는 이 사업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선거용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지방대학 교수, 지방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지역의 교수와 총장들이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것들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는 관계없고 선거와도 관계없이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지방대학 교수들끼리 수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았던 제도들입니다. 그 점 오해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모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원확보율 60% 이상, 학생충원율 60% 이상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방대학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차츰 충원율도 높이고 교수확보율도 높이면 우리가 말하는 퇴출을 염두에 두는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집행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일부 예산으로 시범운영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거의 최종안이 나올 단계가 되었고 11월 중에는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벼락치기로 3, 4개월 만에 만든 것이 아니고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지역의 많은 교수들이 참여해서 벌써 2,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내년 예산도 통과가 안 됐고 예산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물론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는 10월 31일 의원총회에서 이 사업을 전부 보고하고 그날 자기들 주요 홍보사업으로 발표했어요. 내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이십니다.

○**김정숙 위원** 내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부총리 말씀대로 3, 4년 전부터 지방에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이 있었다면 왜 열린우리당이 이것을 채가서 홍보를 하고 난리가 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그쪽 당에서 우리 정부 쪽으로 당정협의회를 하자, 와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시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의원총회까지 가서 보고를 하십니까? 당정협의면 정책입안자들하고 그쪽의 정책팀들과 정보를 은밀하게 주고받고 하실 일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우리 부에서 정책협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돈이 어디서 새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매년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냥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지방대학육성사업 예산 600억 원 전부를 이쪽으로 빼고 있고 대학 다양화·특성화사업 예산 1150억 원 중에서 550억 원 그리고 국립대발전계획사업 예산 400억 원을 여기다 뺐어요. 그다음에 추가 재정 650억을 내년 예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나가 있는 돈을 떼어다가 보따리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지역발전과 연계하고 아이들 취업까지 연계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권역별로 열세 군데에 다 하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돈 갈라주는 평가단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지역혁신협의회가 다 결정합니다.

제가 빨리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스탠포드대학교가 실리콘밸리를 연결해서 지역발전도 시키고 다 좋았는데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을 해 줄 것이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국립이나 사립이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단 선정은 지역혁신협의회가 한하는데 이것이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바쁜 이 자리에서 부총리는 정치목적이 없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이라고 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 보면 많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파일럿(pilot) 방식으로 한 군데 정도만 시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신있다고 할 때 이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러 해를 하면 뭐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방에서 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운영·역할 등 현재는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어요.

이제부터 연구 중인 것 같아요. 현재 연구 중이고 결과가 미지수인 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2200억이고 내년부터 3000억 원씩 넣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하려면 국회에 있는 우리들도 이해를 시키고 공청회를 전문가들하고만 하지 마시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사실 BK21도 연구중심 대학과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돈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돈 나누어 주는 프로젝트로 평가절하되어 버렸어요. .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 이것도 말로만 풍성하지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위원들부터 이해를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도 좋은 의견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금년에는 연기하세요.

아니면 파일럿을 선정해서 한두 군데만 부분적으로 실시해 보고 좋으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하도록 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종전의 사업들은 대학에 직접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은 대학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과 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새 예산으로 하지 왜 지방대학육성사업 예산을 빼다 이런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렇게 하면 종전에 이루어진 사업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대학에서는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고 또 학진을 통해서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던 것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선정

을 안 해 주면 못 해요. 지금 돈을 주는 주체, 평가단을 바꾸려고 하는데 평가단을 어떻게 전문성 있게 구성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 되지 잘 따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연구기간이 필요하고 의견도 모아야 되고 또 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이게 예요.

마치 BK21 할 때와 똑같아요. BK21도 구체적인 것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할 때 2000억을 내놓았어요. 그때 밤 2시까지 연장했었는데 예산안 통과가 안 되니까 장관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밑그림 없이 '현재 2000억을 해 주면 나중에 예산을 구체화시켜서 집행할 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실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 버리니까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오늘날의 BK21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금년에 650억만 증액되었어요. 그 대신 1550억이라는 돈은, 지금 대학에 나가는 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도 상당히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산업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치밀한 연구작업이 있어야 돼요.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연기하자는 것뿐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盧武鉉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지방대학육성 프로그램을 내시기 이미 2, 3년 전에 저희들은 지방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법적으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장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무엇을 잘 하고 있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체와의 연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범위 내에서 해요.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열린우

리당의 정책으로 발표하지 말고 그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지역에서 열정에 못 이겨서 충성심이 발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 것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나라가 주도를 하고 대통령이 생색을 내고,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예산 나눌 때 각 대학에서 서로 따가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에 정치인들이 또 연루되고 여러 가지 오해받을 것 하지 말고 선거 끝나고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샘플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선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부터 통과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리고 각 당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본 위원도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정말 지방대가 혁신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면 좋지요. 그런데 김정숙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2200억 중 1550억은 이미 기존 예산에 들어 있던 것이고 여기에 추가된 것은 650억밖에 안 됩니다.

3년 전부터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제2의 BK21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도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2200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차관이 가서 직접 브리핑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미 계획을 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던 것을 마치 당을 깨고 나간 열린우리당이 하는 것…… 저는 왜 우리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을 우리 당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열린우리당인데 거기에 가서 그야말로 시행착

오가 가장 많은 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짹짹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을 이제 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 정부가 잘 하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일 중에 별로 잘 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것이 눈에 뻘하게 보입니다.

1550억은 이미 작년에도 집행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잘 연구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확실한 계획과 비전이 보일 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지만 기존에 집행했던 1550억은 각각에서 이미 다 했던 것 아니에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산은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합쳤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정권과 관계없이 제가 대구대학 교수 시절부터……

○**金敬天 委員** 참여정부가 하는 것같이 발표하면 됩니까? 국민들만 속이려고 하고……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교육부가 만든 것입니다.

○**박창달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격과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달 위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런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속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은 지자체, 대학, 연구소, 기업체, 언론이나 NGO같이 지역대학과 기업체를 연계시켜서 대학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협의체입니다.

○**박창달 위원** 그러면 이 혁신협의회가 일단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거르고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아닙니다.

○**박창달 위원** 그러면 대학만 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대학

과 지역경제의 결합입니다.

○**박창달 위원** 대학과 지역경제만 결합하는데 거창하게 혁신협의회 이런 단어를 붙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름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박창달 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과 金敬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탄생도 안 한 지역혁신협의회에 돈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1년 후로 미루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열린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여당 취급합니까? 여당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현재 그 당은 국회에서 소수의 제3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보고해요? 대통령이 입당하면 모르겠는데 대통령도 아직 양다리 걸치고 있는 판국에 무슨 여당이라고 거기에 가서 보고해요?

만약 앞으로 교육부가 그런 식으로 일하면 나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자세한 내용들이 완성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이 문제는 내일 예산안심사소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하기 위한 여대생진로 개발 취업지도 촉진사업에 미반영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기획예산처와 몇 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반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004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10억 원도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개 지역을 지정했고 2002년도에도 3개 지역, 2003년도에 5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매년 5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김정숙 위원** 저밖에 답변 들을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것을 제가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되면 또 한번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내년에 선거용 지원예산으로 둔갑할 것이라는 느낌이 다분히 듭니다.

거점별로 열세 군데에 돈이 똑같이 나가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에요, 똑같이 나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次官 徐凡錫 대학 수라든지 인구 수에 따라서……

○김정숙 위원 혁신협의회에 NGO, 언론 등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정한다는데 제가 듣기에는 예산 나누어 먹는 분위기로 가면서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들어가서 돈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결정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평교수 시절부터 열의를 가지고 계획했던 이 사업을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김정숙 위원 왜 시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모아놓고 이해를 시켜야지 왜 거기부터 보고를 하시냐고요. 이것은 안돼요.

○委員長 尹榮卓 김 위원, 이 부분은 교육부총리께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내일 우리가 삭감하면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김정숙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金敬天 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金敬天 委員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榮卓 위원님들이 거의 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敬天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

심사결과를 오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榮熙 위원, 이규택 위원, 金敬天 위원, 김정숙 위원, 薛勳 위원, 윤경식 위원, 李在五 위원, 박창달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尹德弘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산하단체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出席委員(13人)

權 哲 賢	金 敬 天	김 정 숙	박 창 달
薛 勳	윤 경 식	尹 榮 卓	이 규 택
李 在 五	정 몽 준	趙 富 英	崔 榮 熙
황 우 여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柳 忠 鉉
전 문 위 원	鄭 順 泳

○政府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尹 德 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 관	徐 凡 錫
차 관 보	鄭 奇 彦
기 획 관 리 실 장	金 永 植
학 교 정 책 실 장	李 修 一
인적자원정책국장	鄭 奉 根
평생직업교육국장	白 鍾 冕
대 학 지 원 국 장	張 基 元
국제교육정보화국장	李 文 熙
공 보 관	柳 宣 圭
감 사 관	李 鍾 瑞
교원정책심의관	李 英 萬
교육자치심의관	鄭 永 宣
비 서 실 장	趙 興 來
총 무 과 장	李 杰 雨
정 책 보 좌 관	金 東 煥

○其他參席者

대 한 민 국 학 술 원 장	李 起 虎
사 무 국	

국사편찬위원회장      李 萬 烈  
 교원징계재심위원장      具 寬 書  
 국제교육진흥원장      吳 聖 三  
 국립특수교육원장      朴 慶 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張 乙 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총무부장      洪 淳 善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李 基 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사장      朴 判 溱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朱 子 文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李 鉉 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車 炫 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金 榮 燦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사무총장      徐 世 鉉  
 서울대학교병원장      朴 容 眩  
 경북대학교병원장      全 琇 漢  
 전남대학교병원장      黃 泰 周  
 부산대학교병원장      朴 焯 圭  
 전북대학교병원장      梁 斗 鉉  
 충북대학교병원장      金 承 澤  
 충남대학교병원장      李 俊 揆  
 경상대학교병원장      朴 哲 秀  
 제주대학교병원장      洪 剛 義  
 강원대학교병원장      金 權 宇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張 凡 石

(10월30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31일 회부됨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이주영·김형오·박재욱·박헌기·  
 안상수·안택수·오경훈·오세훈·이근진·  
 이용삼·이윤성·이인기·장성원·정병국·  
 조용규·황우여 의원 발의)

11월3일 회부됨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증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3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3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  
 을 정하여 회부됨

○通知

위원보임에대한통지

10월31일, 의장으로부터 열린우리당 소속 김  
 원기 의원과 김근태 의원이 각각 당 위원회  
 에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김원기	통일외교통상	교 육	열린우리당 주비위원회
김근태	재정경제	교 육	열린우리당 주비위원회

(10월31일)

○議案回附

한일과거사연구및보존사업회법안(김희선 의원 대  
 표발의)

(10월30일 김희선·김덕규·김성호·김태홍  
 ·박명환·서상섭·송광호·송영길·심재권  
 ·유시민·이낙연·이종걸·이창복·이호웅  
 ·임종석·장성원·정범구·정병국 의원 발  
 의)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